



즉시 사용

비고	* 국무총리 모두말씀 회의 직후 별도 배포 # 공동배포 : 행정안전부, 농림축산식품부, 환경부, 국토교통부		
답 당	<총괄> 국무조정실 기획총괄정책관실	과장 서영석, 서기관 조상연 (044-200-2056, 2057)	
	반려견 안전관리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과장 김신재, 사무관 김동현 (044-200-2231, 2232)
		농림축산식품부 축산환경복지과	과장 박홍식, 서기관 최정미 (044-201-2351, 2363)
	겨울가뭄 대책	국무조정실 농림국토해양정책관실	팀장 이현우, 사무관 조영주 (044-200-2321, 2323)
		행정안전부 자연재난대응과	과장 임재웅, 서기관 김윤진 (044-205-5230, 5242)
		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반과	과장 한준희, 사무관 이재천 (044-201-1851, 1857)
		국토교통부 수자원개발과	과장 박병언, 사무관 임성훈 (044-201-3602, 3607)
환경부 수도정책과		과장 조희송, 사무관 박동명 (044-201-7110, 7126)	
기상청 이상기후팀	팀장 박종서, 사무관 오태석 (02-2181-0470, 0462)		

반려견 안전관리의무가 강화됩니다.

<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>

- ▶ 위험도에 따라 맹견·관리대상견·일반견으로 분류, 차별화된 관리의무 부과
- ▶ 5개 견종 맹견에 추가, 유치원 등 어린이시설 출입금지
- ▶ 입마개 착용 의무화하되 유예기간(2년) 두어 반려견 소유자 혼란 최소화
- ▶ 위반행위 과태료 50만원→300만원, 사망·상해사고시 형사처벌 근거 신설

<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 >

- ▶ (농업용수) 물 부족 예상지역 물 채우기 추진(46개소 926만톤), 추가용수원 개발
- ▶ (댐 용수) 용수공급 조절, 댐 간 연계, 비상공급시설 건설 등 선제적 대비
- ▶ (생활용수) 7개 시·군 비상급수, 도서·산간지역 상수도 확충(4,260톤/일)

□ 이낙연 국무총리는 1월 18일(목) 오전, 정부세종청사(세종-서울 영상회의)에서 제25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(약칭 '현안조정회의')를 주재했습니다.

-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'반려견 안전관리 대책'을 심의·확정하고, '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'을 점검했습니다.

* 참석자 : 기재부·교육부·과기부·행안부·문체부·농식품부·산업부·복지부·환경부·고용부·국토부 장·차관, 국조실장, 기상청장 등

◆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 (농림축산식품부)

- 정부는 반려견으로 인한 **상해·사망사고***가 늘어남에 따라 반려견 소유자의 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를 조성하는데 중점을 둔 '반려견 안전관리 대책'을 마련했습니다.

* 반려견 물림사고(한국소비자원) : ('12) 560건 → ('14) 676건 → ('16) 1,019건

- 지난해 10월부터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동물보호단체, 소비자단체, 전문가, 지자체 등의 의견을 들어 이번 대책을 마련했으며,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< ① 반려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 강화 >

- 반려견을 위험도에 따라 3종(맹견, 관리대상견, 일반반려견)으로 분류하여 안전관리 의무를 차등화하기로 했습니다.
- (맹견) 5개 견종을 맹견에 추가하고, 맹견에 대해서는 △공동주택 내 사육 금지 △소유자 없이 외출 금지 △유치원, 초등학교 등 어린이 관련 시설 출입 금지 등 강력한 관리 의무를 부과할 계획입니다.

【맹견 범위】

▶ (현행) 도사견, 핏불 테리어, 스태퍼드셔 테리어,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 → (변경) 도사견, 핏불 테리어, 로트와일러, 마스티프, 라이카, 오브차카, 울프독, 캥갈과 유사한 견종 및 그 잡종

- (관리대상견) 맹견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거나 체고 40cm이상인 개는 관리대상견*으로 분류하여 엘리베이터, 복도 등 건물내 협소한 공간과 보행로 등에서는 입마개 착용을 의무화 하겠습니다.

* 다만, 전문기관의 평가를 통해 소유자가 안전하게 관리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경우 관리대상건에서 제외 가능

○ 한편, 모든 반려견은 목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고, 엘리베이터 등 협소한 공간에 적용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습니다.

< ② 관리의무 위반자에 대한 제재 및 단속 강화 >

○ 안전관리 의무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고,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상해·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소유자를 형사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.

【위반자 처벌 기준】

▶ 과태료 부과

- 맹견 안전관리 의무 위반 : 50만원 이하 → 300만원 이하
- 관리대상견 목줄·입마개 미착용, 일반반려견 목줄 미착용 : 1회 5만원 / 2회 7만원 / 3회이상 10만원 → 20만원 / 30만원 / 50만원

▶ 형사 처벌

- 사망 : 3년이하 징역, 3천만원이하 벌금 / 상해 : 2년이하 징역, 2천만원이하 벌금

○ 또한, 동물보호 담당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(17.12, 사법경찰 직무법 개정)하여 단속을 강화하고, 올해 3월부터는 안전관리 의무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* 제도를 시행할 예정입니다.

* 목줄·입마개 미착용 등 안전관리 의무 위반사항 신고자에 대해 과태료 부과금액의 20% 까지(최대) 지급

< ③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>

○ 맹견 소유자 교육을 의무화 하고,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 교육을 확대하는 한편 반려동물 에티켓에 대한 홍보를 확대하여 서로 배려하는 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.

- 이와 함께 반려견 행동교정 국가자격을 도입하는 등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, 지자체의 반려견 놀이터 설치도 지원하겠습니다.

- 또한, 동물 등록 월령을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변경하여 분양 즉시 등록하도록 개선하고, 반려견 유기행위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 포함할 계획입니다.
- 앞으로, 정부는 새로운 제도 시행을 위해 동물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하고, 제도 시행에 앞서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여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
- 교육·훈련 인프라 구축 등 사전준비가 필요한 사항(관리대상견 입마개 착용 의무화 등)에 대해서는 2년 이상의 유예기간을 부여하여 반려견 소유자들의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 할 계획입니다.

◆ 겨울 가뭄상황 및 대책 (행안부·농식품부·국토부·환경부)

- 최근 1년간('17.1.15~'18.1.14) 전국 강수량(970.7mm)은 평년(1,307.7mm)에 비해 74% 수준인 데다가, 최근 3개월 강수량(45.8mm)은 41%에 그쳐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수가 부족한 상황으로
- 봄철 영농기에 대비하여 남부지방, 특히, 가뭄단계에 있는 지역과 저수량이 낮은 댐은 선제적 준비가 필요한 실정입니다.
- 이에, 정부는 '관계부처 합동T/F'(행안부)를 중심으로 중앙부처·지자체·유관기관간 가뭄정보 공유 및 협력 등 범정부적 대응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.

< ① 농업용수 분야 (농림축산식품부) >

- 남부지방 농업용 저수지는 평년 대비 80% 수준의 저수율*을 보여 5월까지 강수량이 적을 경우 용수부족이 전망되는 상황이며, 특히 밀양, 울주, 경주 등 일부 시·군지역의 경우 저수율**이 40% 내외에 불과한 실정입니다.

* 저수율(1.15.기준) : 전국 69%(평년대비 88%), 전남 58(81), 경남 61(81)

** 저수율(1.15.기준) : 밀양 36%(평년의 47%), 울주 48%(58%), 경주 47%(58%)

- 이에 농식품부는 전국 저수지 저수량 분석을 거쳐 작년 9월부터 올해 영농기에 물 부족이 예상되는 저수지 46개소에 926만톤*의 물을 채우는 등 선제적으로 용수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* '18.6월까지 계획, 1.9일 현재 목표 대비 37%인 341만톤 확보

- 이와 함께, 본격적인 영농기 전까지 배수로 및 하천에 물막이를 설치하는 등 지역실정에 맞는 추가 용수원 개발을 추진하고, 집단 못자리 설치, 논 물가두기 등 물 절약 노력도 기울일 계획입니다.
- 또한, 매년 반복되는 가뭄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저수지·양수장 등 수리시설을 지속 확충('18년 3,813억원)해 나가고, 수계연결 확대 등을 통해 지역 간 물 수급 불균형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② 댐 용수 분야 (국토교통부) >

- 국토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댐(다목적댐 20개, 용수댐 14개)의 저수율은 예년의 95.4% 수준으로, 생활·공업용수가 정상 공급되고 있으나, 저수량 부족이 우려되는 낙동강·섬진강 수계와 보령댐 등*에서는 하천유지 용수 공급을 감량하는 등 가뭄상황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.

* 밀양댐(예년의 48% 저수율), 보령댐(62%), 주암댐(69%), 부안댐(49%), 합천댐(69%), 운문댐(22%), 평림댐(50%), 대곡-사연댐(42%)

- 이에, 국토부는 △모든 댐에서 꼭 필요한 수량만 공급 △댐 간 연계운영 △수원 대체공급 △도수로 가동 △비상공급시설 건설 등을 통해 가뭄에 대비하고 있습니다.

* (보령댐)도수로 가동 (밀양댐)지방상수도 수원 대체공급 (주암댐)수어댐 등 댐 간 연계운영 (부안댐)섬진강계통 광역상수도 대체공급 (운문댐)비상공급시설 건설(2월초 통수) 등

- 또한, 가뭄 심화에 대비하여 자율적인 물 절약(급수조정)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* 지급도 실시할 계획입니다.

* 제한급수가 필요한 상황에서 자율절수 실적에 대해 지원금(요금의 0.5~2배) 지급

- 아울러, 가뭄취약지역에 대해 광역상수도 확충, 급수체계 조정 등 중·장기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장래 물 부족에 빈틈없이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.

< ③ 생활용수 분야 (환경부) >

- 이번 겨울가뭄으로 완도군, 가평군 등 7개 시·군(9,941세대, 18,862명)에서 비상급수가 실시되고 있습니다.

- 이 지역에 대해 환경부, 지자체, 수자원공사 등이 협조하여 **운반급수 및 제한급수**를 실시 중이며, **급수여건 개선***도 진행되고 있습니다.

* (완도) 물 과다소비 사업장 이전 (신안) 광역상수도 연계 (가평·광주) 지방상수도 확충 (삼척·정선) 관정 개발 (인천) 취수원 개발 등

- 과거 가뭄발생 사례가 있거나 가뭄에 취약한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을 막기 위한 선제적 조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.

- 지방상수도 미보급 지역 중 상습 가뭄이 발생한 도서·산간 7개 시·군에서는 지방상수도 확충을 통해 **용수(4,260톤/일)**를 확보하고,

- 지방상수도가 보급된 지역도 가뭄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, 강변여과수 개발 등을 통해 **용수(111,656톤/일)** 확보 중에 있습니다.

- 아울러, 수원 부족으로 가뭄이 빈발하는 지역에 **식수원 개발**, 누수율 저감을 위한 **노후 상수도 개량***을 추진하고, **물 수요관리** 등을 통해 가뭄을 근본적으로 극복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.

* '28년까지 118개 시·군 대상, 연간 1.6억톤 물(보령댐 저수용량의 1.4배) 절약